



이란 핵협상 타결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시사점

전은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 IAEA 원자력발전국 인턴
- KAERI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들어가는 말

길고 긴 협상 끝에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과 P5+1(또는 E3/EU+3,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독일)은 이란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4월 2일, 이란과 P5+1은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심 사안에 잠정 합의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최종 기한을 앞두고 시작된 최종 협상은 3차례 협상 기한을 연기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되어 18일 만에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본 합의는 2002년 8월 15일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 (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이란 중부 Natanz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이후 불거진 이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의혹을 풀고,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가 13년간 노력한 결과이다.

이란이 과격한 이슬람주의 및 테러 지원 활동 등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 합의 도달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봄 개최된 핵비확산조



약(NPT, Treaty 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제9차 평가회의가 미국, 영국 및 캐나다의 거부로 최종 문서 채택에 실패한 이후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이끄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구설수에 오른 시점에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와도 같았을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최종 합의 이후에도 미국 의회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본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악화된 미-러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낸 합의가 실로 오랜만이라는 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은 협상 당사자 모두에게 큰 성과임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란과 P5+1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타결될 수 있었던 요인을 확인하고, 합의문 분석을 통해 본 합의가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란 핵 프로그램 구축 배경

이란은 1950년대 팔레비(Mohammad Reza Pahlavi) 왕정 하에서 미국의 지원에 따라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중동 지역의 원자력 선두 국가로서,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Atoms For Peace' 제창 이후 1957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지원 하에 원자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연구로의 가동에 맞추어 1968년 핵비확산조약에 서명하고, 1970년 NPT 발효에 따라 핵비보유국으로서 NPT에 참여하여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1979년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 이슬람 혁명과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이란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지난 30여 년간 국제 사회에서 대(對)이란 제재를 주도해왔으며, 과격한 이슬람주의 및 테러 지원 활동 등으로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란 정부 전복 이력,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은 이란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이라크로부터의 안보 위협, 이스라엘의 핵무장 등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 파키스탄의 칸 (Abdul Qadeer Khan) 박사가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농축 기술 및 일부 관련 기기를 제공받으면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합의 배경

국제 사회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제재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꺾이지 않자 더욱 강화된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거하여 압박을 강화하였고, EU는 역내의 모든 대이란 운송 보험을 중단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출이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이 없이는 운송이 불가한데, 유조선 운송보험을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EU가 운송 보험을 중단함에 따라 이란의 원유 수출 판로가 철저히 봉쇄된 것이다.

석유 판매 금지로 이란은 정부 수입이 약 50% 이상 감소했으며, 국방수권법 조치 이후 석유 수출량이 60% 이

상 감소하여 석유 수출 금액이 1/4 수준으로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원유의 경우 생산 중단 시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생산 중단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본 조치 이후 석유 판로가 봉쇄된 이란은 원유 저장 여력이 포화되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 전체 현금 수입의 80%가 석유 부문에서 생산되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 국가인 이란은 석유 판매 수입 급감으로 국내 총생산 감소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IMF는 이란의 실질 소득 감소가 2% 수준이라고 추정했으나, 체감 소득 감소는 5~8%, 실업률 증가는 20% 수준이 될 것이라 밝혔으며¹⁾ 2013년 7월 이란 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 월평균 물가 상승률이 45%

라고 발표했으나, 실질 물가 상승률은 50~70%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석유 판매 금지 이후 이란의 경제 수준은 최악으로 치달게 되었다.

즉, 이란의 경제 유형을 고려한 미국의 이란 제재법 및 EU의 이란에 대한 운송 보험 중단은 압박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한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결국 중도적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듯, 정권 교체 이후 이란은 핵 협상에 적극 임하게 되었고 역사적 합의 도출을 이루어냈다.

〈표 1〉 이란 핵협상 주요 일지

일시	주요 내용
2002. 8. 15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 Natanz에 비밀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 폭로
2003. 6. 6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및 UN안전보장이사회(UNSC)에 보고
2003. 10. 21	E3-이란 테헤란 합의
2004. 11	E3-이란 파리 합의
2005. 6. 26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당선
2005. 7	미 정부, IAEA에 핵무기 관련 문서(Project 110 & 111)가 담긴 노트북 제시
2005. 8~9	이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IAEA, NPT 위반 지적
2006. 4. 9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 12. 23	UNSC, 1차 제재 결의안(UNSC1737)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7. 3. 24	UNSC, 2차 제재결의안(UNSC 1747)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련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2008. 3. 3	UNSC, 3차 제재 결의안(UNSC1803)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 검색 허용
2009. 11. 29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10. 6	STUXNET 바이러스로 인한 원심분리기 훼손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 지목
2010. 6. 9	UNSC, 4차 제재 결의안(UNSC 1923) 채택 ²⁾

1) 인남식, 2013 이란 핵문제 제네바 합의의 함의와 전망, 3~4P, 외교안보연구원, 2013.12.26

2) UNSC는 '06년부터 '10년까지 6차례 이란 결의를 채택/이중 제재 결의는 4개이며 단계적으로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대상 확대



일시	주요 내용
2011. 6. 12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kg 이상 생산 발표 / UNSC 1년 제재 연장 결의안(UNSC1987) 채택
2011. 11. 8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2. 4~2013. 4	P5+1의 체제로 알마티, 모스크바, 바그다드, 이스탄불 등에서 협상
2012. 6. 7	UNSC 13개월 제재 연장 결의안(UNSC2049) 채택
2013. 8. 4	이란 중도적 온건파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정부 출범
2013. 10. 5~16	로하니 정부 출범이후 첫 이란-P5+1 협상 (제네바)
2013. 11. 7~ 9	2차 이란-P5+1 협상 (제네바)
2013. 11. 20~24	3차 이란-P5+1 협상에서 공동이행계획(JPOA, Joint Plan of Action) 도출 (제네바)
2014. 1. 20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2014. 7. 19	협상 시한 4개월 연장(11월24일까지),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불 해제 발표
2014. 7. 21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2014. 8. 27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kg→1kg
2014. 10. 15	이란-미-EU 외교대표 3자 협상(비엔나)
2014. 11. 9~10	이란-미-EU 외교대표 3자 협상(무스카트)
2014. 11. 11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 11. 18~24	이란-P5+1-EU 장관급 회담
2014. 11. 24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 · 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
2014. 12. 17	미-이란 핵협상 재개(제네바)
2015. 1. 4	밥 코커(R-TN) 미국 상원의원, 핵협상 실패 시 대이란 추가제재 주장
2015. 1. 14	미-이란 양자협상(제네바)
2015. 1. 27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2015. 2. 19	미-이란 양자협상(제네바)
2015. 3. 3	미-이란 양자협상(몽트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 의회서 핵협상 강력비판
2015. 3. 9	미 공화당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정권서 폐기” 경고서한
2015. 3. 15/26/30	이란-P5+1, 핵협상(로잔)
2015. 3. 31	이란-P5+1, 핵협상(로잔) -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2015. 4. 1~2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 · 타결공식 발표
2015. 4. 14	미 의회 Bob Corker 상원의원의 이란 합의 의회 검토 법안 통과
2015. 6. 30	이란-P5+1, 핵협상(비엔나) 기한 1차 연장
2015. 7. 8	이란-P5+1, 핵협상(비엔나) 기한 2차 연장
2015. 7. 11	이란-P5+1, 핵협상(비엔나) 기한 3차 연장
2015. 7. 14	협상 시작 17일 만에 최종 합의 도달

이란의 주요 핵 시설

◆ Arak 중수로

이란 중부 Arak 지방에 건설 중인 중수로는 2002년 12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가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으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외에 플루토늄도 핵무기 제조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방은 강력하게 Arak 중수로의 가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서방의 의혹에 대해 이란은 201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찰관들에게 동 부지 방문을 허용하였으나 원자로만 공개하고 중수 시설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13년 2월 중수로 냉각기에서 증기가 방출되는 위성사진을 입수했다며 중수 시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도³⁾했다.

◆ 농축시설

이란은 중부 Natanz와 Fordow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Natanz와 Fordow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는 약 20,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Fordow 시설은 산악지대 지하에 건설되었으며, 2012년 1월 농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2009년 9월 이 시설을 IAEA에 보고했으며 당시 5%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으나 2011년 6월에는 20%까지 생산하겠다고 IAEA에 통보한 상태이다.

◆ Parchin 군사시설

Parchin 군사 기지는 2011년 핵실험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2005년 IAEA가 이곳을 조사했으나 이란이 조사 지역을 제한한 바 있으며, IAEA는 201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Parchin 기지에 핵탄두용 고품실험을 위한 격납용기가 설치됐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P5+1간 JCPOA 주요 내용

최종 합의문은 이란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의 농축 능력 및 우라늄 비축량 제한, Arak 중수로의 설계변경을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제한, 비밀 핵 프로그램 개발 방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란이 합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이란에게 부과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진행된 이란과 P5+1간의 협상 핵심 쟁

점은 △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시점 △ 군사적 측면 가능성(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s) △ UN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해제였다.

1. 이란의 농축 능력

이란의 농축 능력과 농축 수준 및 비축량은 지정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나탄즈(Natanz) 이외의 농축 시설은 가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³⁾ Iran's 'Plan B' for a nuclear bomb, The Telegraph, 2013년 2월 26일, 자세한 내용은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middleeast/iran/9896389/Irans-Plan-B-for-a-nuclear-bomb.html> 참조



이란 나탄즈 핵시설 원심분리기. 이번 합의는 2002년 8월 15일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 (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이란 중부 Natanz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이후 불거진 이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의혹을 풀고,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가 13년간 노력한 결과이다.

- 약 20,000개의 원심분리기 중 1세대 원심분리기 (IR-1) 6,104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분리기는 따로 보관하고 IAEA의 사찰을 받음.
- 향후 10년 동안은 IR-1 중에서도 5,060개의 원심분리기만을 농축 우라늄 생산에 이용
- 최소 15년 동안 3.67% 이상 우라늄 농축 금지
-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 건설 금지
- 적어도 10년 동안은 현재 2~3개월 수준인 핵무기 전용 시간을 최소 일 년으로 연장
- 지하 농축 시설인 Fordow에서는 농축 금지
- 최소 15년 동안 Fordow 시설에서 농축을 하지 않으며, 본 시설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의 핵, 물리 및 기술 센터로 전환하고, 오직 합의된 연구 분야의 국제 협력만 추진
- Fordow에서 핵분열 물질 보유 금지

2. 사찰 및 투명성 조치

- JCPOA 규정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Modified Code 3.1⁴⁾, 전면안전조치(CS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및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적용
- 이란의 과거 및 현재의 핵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 및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시설 접근성 강화
-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용 물질 확보를 위한 전용 시간을 1년으로 제한, 25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광산에 대한 사찰 허용 및 모든 원자력 공급망 사찰 허용
- 원심분리기 제조 시설 등을 포함한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은 무기한 적용
- 군사적 측면 가능성(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관련 IAEA의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 이행 및 군사시설 접근 허용

4) 원자력 시설 건설을 결정했을 경우 IAE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시설에 핵물질을 도입하기 180일 이전에 IAEA에게 보고할 것을 명시한 CODE 3.1의 수정본임.

3. Arak 중수로 및 재처리

-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Arak 중수로 재설계 및 재건축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
- Arak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는 해외로 반출
- 잉여 중수는 국제 시장에 판매
- 재처리 활동 및 핵폭발장치 개발 관련 활동 전면 금지

4. 제재 해제

협상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하게 의견 교환이 있었던 사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사안이 아닌 UN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제재 해제였으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본 사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단계적 해제로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

- IAEA가 PMD를 포함한 이란 사찰을 완료한 결과를 12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해제
- UN 무기 금수 조치 제재는 5년, 탄도 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 후 단계적 해제
- 향후 10년 이내에 이란이 합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UN 제재는 즉각 복원(Snap back)되며, 미국 및 국제사회 역시 이에 대응

최종 합의 이후 반응 및 시사점

최종 합의 직후 국제 사회는 미국 외교의 승리라는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이스라엘 및 아랍 국가들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는 본 합의안에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밥 코커(Bob Corker) 상원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 Council, SFRC) 위원장은 본 합의안이 이란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인지 의문이라면서 합의안을 비난하였다. 미국 의회는 합의문 세

부사항을 60일간 검토한 이후 합의문 승인 또는 불승인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본 합의안이 이란 핵보유 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이란 핵무기 보유를 위한 모든 방안을 차단했고 양측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반한 협상을 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만약 의회가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본 합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본 합의는 역사적 실수이자 이란에게 항복한 꼴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의회에서 본 합의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계속 지켜 봐야 할 것이다.

미국 의회는 근본적으로 이란 체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특히 이란의 중동지역에서의 테러 지원 관련 사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호전적 활동을 지속한다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 의회의 60일간 검토 기간을 채우기 전에 UNSC가 합의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UNSC의 결정 이후 미국 의회가 국제 사회의 합의를 무효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란 협상에 참여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 장관은 본 합의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상호 윈-윈(win-win) 전략이었다고 강조했다. 로하니(Rouhani) 이란 대통령 역시 본 합의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으며, 이란 국민들은 경제 제재 해제로 향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란은 최종 협상 시 군사 시설 및 PMD 사찰 거



이란 핵협상에 참여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 외무장관들. 한국이 2010년 7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이란은 사우디와 함께 중동의 4대 건설 사업 수주 시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 경제 제재 및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의 즉각적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서방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양측이 100% 승리보다 현실적으로 타협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도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명분을 제공하고,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엄격히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양측이 모두 명분을 챙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더불어 이란 핵협상 타결은 우리나라에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란이 JCPOA 상의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란은 한국의 다섯 번째 원유 수입국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원유 도입량의 약 10%가 이란산 원유였으나 2012년 미국의 NNDA 도입 이후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이 2010년 7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이란은 사우디와 함께 중동의 4대 건설 사업 수주 시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란 핵협상으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유일한 위협 요인으로 남은 북핵 문제의 합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요인인 경제 제재가 고립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이미 NPT를 탈퇴하고 자국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⁵⁾하여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북한은 NPT를 비롯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하에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주장하는 이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북

5)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5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함.

한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제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도발-합의-위반을 반복해 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신뢰도는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없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자국의 외교 정책 실패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란 협상 타결 이후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은 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아닌 이란 사례를 협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몇 차례 합의를 반복해

왔을 뿐 아니라,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북한에게 이란 사례와 같이 일부 기기와 기술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CVID 차원에서라도 이란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하고자 했던 Arak 중수로 시설의 재설계에 한국이 참여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고, 향후 북핵 문제 해결 시에 본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국제 사회의 감시 체제 하에 둘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국제 사회에게 박수를 보내고, 본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마련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강동균, [이란 특수 오나] "7500만명 시장 열린다" ... 테헤란 호텔, 서방 기업인들 벌써 '북적', 한국경제, 2015. 4. 2.
2. 김석우, 이란 핵 협상 평가와 정책적 함의, KINAC 핵비확산 분석지, 2014. 1. 6.
3. 노석조, 美 손잡은 이란 vs 반발하는 사우디 ... '中東 맹주' 힘 겨루기, 조선일보, 2015. 4. 4.
4. 빅터차, 이란·북한 핵협상의 6가지 문제점, 중앙일보, 2015. 4. 3.
5. 인남식, 2013 이란 핵문제 제네바 합의의 함의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13. 12. 26.
6. 이재윤, 〈그래픽〉 이란 주요 핵시설, 연합뉴스, 2015. 4. 15.
7. 평화협력원,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정치동학: 북한과 이란사례, KINAC, 2014.
8. 조철환, 이란 경제 날개 달고 ... 중동 정세는 요동칠 듯, 한국일보, 2015. 3. 31.
9. 채수환, 이란 1500억弗 인프라시장 빛장풀려 ... 제2 중동불 기대, 매일경제, 2015. 4. 3.
10. Iran's 'Plan B' for a nuclear bomb, 「The Telegraph」, 2013년 2월 26일,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middleeast/iran/9896389/iran-Plan-B-for-a-nuclear-bomb.html>
11. Semira N, Nikou, Timeline of Iran's Nuclear Activities, The Iran Primer, 2015
12. State Department Fact Sheet, Parameters for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Regar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uclear Program, State Department, 2015. 4. 2.